

아베노믹스의 미래와 한국경제의 대응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

지난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연립정권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참의원 투표대상 121석 중 76석을 얻었는데, 이번 선거의 대상이 아니었던 의석 가운데 이미 확보하고 있던 59석을 합하여 모두 135석을 차지한 것이다. 이로써 아베氏は 자민당(115/242) 단독 과반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연합정권의 파트너인 공명당이 얻은 의석(20/242)을 합하여 참의원의 과반(135/242)을 얻었다. 아베 내각은 중의원에서도 이미 2/3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로 아베氏は 이번이 없는 한 다음 번 선거가 있는 2016년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아베 정권이 압승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지지였다. 아베氏が 총리에 당선되던 작년 12월 이후 일본의 경제정책은 아베의 이름을 딴 ‘아베노믹스’라는 슬로건으로 지칭되어 왔다. 경제정책의 성공에 자기 이름과 정권의 명운을 건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아베노믹스는 세 가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에게는 일본 전국시대 다이묘(大名)였던 모리의 일화로부터 유래한다는 “세 개의 화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들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고 일본경제의 장래를 점쳐보며 그에 대한 한국경제의 대응방향을 생각해보기에 앞서 “세 개의 화살”로 이루어졌다는 아베노믹스가 적어도 정치적 효과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슬로건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다.

정치적 Propaganda로서의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이란 명칭은 일본에서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아마도 일본인이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유명한 전설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한다. 1500년대의 모리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다 이모가 세 아들에게 화살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 꺾어보라고 했더니 세 명 모두 화살을 쉽게 꺾을 수 있었지만, 화살 세 개를 한꺼번에 주고 꺾어 보라고 했더니 아무도 세 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꺾지 못하더라는 일화이다. 분열하면 실패하지만 협력하면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다. 여기에 나오는 “세 개의 화살”을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정책에다가 이름으로 갖다 붙임으로써 이 정책들이 개별적으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시행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정책의 성격 내지 신뢰성 같은 것들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 붙이냐에 따라 정책의 본질적 내용과 상관없이 커다란 영향을 받곤 한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그것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이 필요한데, 국민들로부터 그런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이름을 잘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정책이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이름 하나로 간단명료하게 일반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간단명료하게, 게다가 매우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설에서의 화살 이미지가 중첩되면서 세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아련한 환상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세 개의 화살”이라는 이름은 20년 동안 안 풀리던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해결을 위해 온갖 고민 끝에 드디어 500년 묵은 전설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어떤 서사적(敍事的) 느낌마저 강하게 풍긴다. 더욱이 “화살”이라는 단어에는 멀리 있는 과녁을 조준하는 뚜렷한 목표감 내지 긴장감이 있다. 과녁을 향해 하늘을 날아가는 화살 세 개가 모여 아베노믹스를 구성한다는 것 또한 정치인으로서 유약한 이미지가 있던 아베氏에게는 결단력, 추진력, 그리고 그가 간절히 원하는 전투적 이미지까지도 덧씌워주는 절묘한 설정이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몇 십 년 동안 “세 개의 화살”을 뛰어넘을 만한 작명(作名)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햇빛 정책” 정도가 아니었겠나 생각된다. “햇빛 정책”이라는 이름도 그 정책의 본질적 내용, 즉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 얼마나 올바른 정책이었는지, 정책효과가 얼마나 긍정적이었는지와는 상관 없이, 적어도 국가정책에 붙인 이름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작명(作名)이었다고 본다.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솝동화에서부터 “햇빛”이라는 단어를 빌려옴으로써 누구나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름만으로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간단명료하게 전달될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호전적인 체제에 기독교적 선의를 무한정 베푼다는 선행의 이미지, 대결이 아닌 유도(誘導)로써 문제를 푼다는 평화의 이미지까지 부수적으로 전달하는 매우 탁월한 명칭이었다.

어쨌든 “세 개의 화살”이라는 이름이 정치적 Propaganda로서는 이처럼 커다란 장점이 있지만, 화살의 내용을 뜯어보면 그것들이 과연 지난 20년간의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일본경제를 구해낼 수 있을지 아직은 의심스러워 보인다. 적어도 이제까지 나왔던 세 개의 화살만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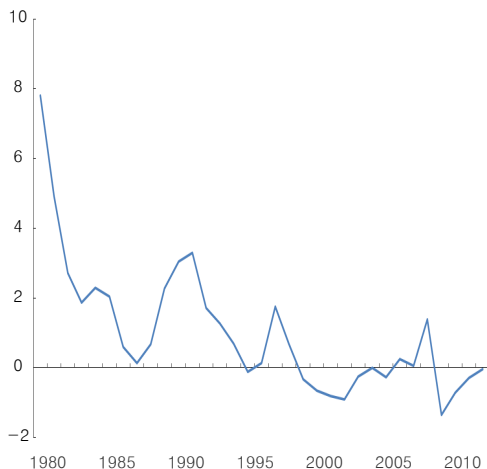
일본경제를 구해내는 열쇠의 역할보다 일본경제를 과탄으로 안내하는 지름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일본경제를 구하기에는 화살 세 개로는 모자라고, 최소한 네 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화살 하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네 번째 화살, 즉 강력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아베노믹스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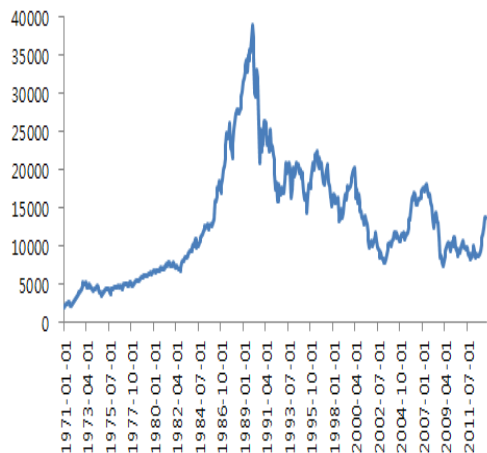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은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하는 것이다. <그림 1>에서처럼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91년, 그러니까 장기침체가 처음 시작되던 해에 3.3%를 기록한 이후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한 번도 2%를 넘어 본 적이 없었다. 1997년의 1.76%가 가장 높은 기록이었다. 2%의 인플레이션을 그것도 2014년 말까지 달성하겠다는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이 얼마나 야심 찬 목표를 겨누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양적완화 역시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일본 중앙은행이 매입하려는 국채 및 회사채의 규모는 2010년 1월을 100으로 놓을 때 2013년 중반에 150을 돌파하고 2015년 초에는 220까지 늘어나도록 계획되어 있다. 미국 자산매입규모가 2010년 1월을 100으로 했을 때 2013년 말에 150을 넘기고 2014년 초 170에 도달한 이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스케줄을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양적완화가 얼마나 도전적인 계획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림 1>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그림 2> 월평균 Nikkei 지수 추이



일본은 1999년 초 콜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제로 수준까지 내리는 극단적인 통화팽창을 실험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제로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내는 데에 실패했었다. 1997년 말에 시작된 일본의 금융위기가 1999년에 이르러서도 마무리 되지 않아 금융권에 부실채권이 청산되지 못했고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자금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다 보니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는 플러스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실물경제를 자극하는 데에도 별로 성공하지 못했었다.

이에 비해 2013년의 아베노믹스는 제로금리에 더하여 국채와 회사채를 대량 매입함으로써 본원 통화의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는 방식이다. “윤전기를 돌려 무제한으로 엔화를 풀겠다”던 아베氏の 말 대로 돈을 풀더라도 아주 강하게 풀어 일본경제 전체를 아예 유동성으로 덮어버리다시피 하다 보니 “유동성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격언처럼 드디어 실물경제가 자극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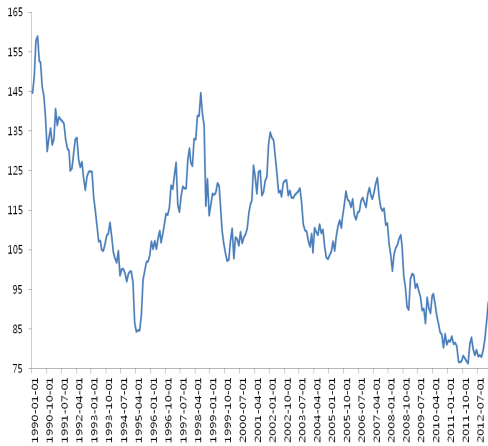
아베노믹스의 가시적 성과

가장 먼저 금융시장에서부터 가시적인 반응이 나왔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2012년 11월 월평균 9,059 포인트였다가 아베 氏が 총리에 취임한 뒤부터 급등하여 6개월 뒤인 2013년 5월에는 월평균 14,532 포인트까지 60%나 상승하였다(<그림 2> 참조). 이것을 우리의 느낌으로 환산해 보면, 금년 7월 중 종합주가지수가 대략 1880선임을 감안할 때 반년 뒤인 내년 1월에 종합주가지수가 월평균 3015 포인트로 상승하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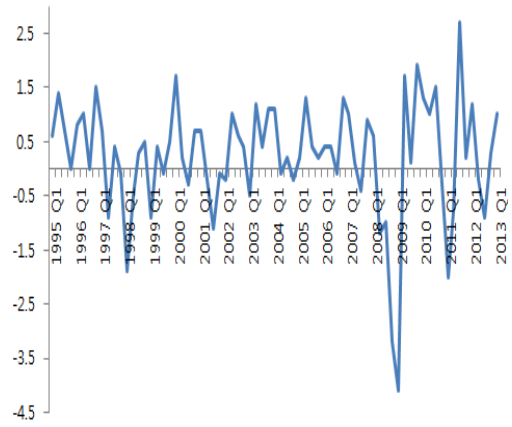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통화팽창으로 달러당 엔화 환율도 크게 절하되었다. 2012년 11월 월평균 엔화 환율은 달러당 81.05엔이었는데 2013년 5월에는 달러당 100.99엔으로 6개월 만에 24.6%나 절하되었다. 달러당 100엔대라는 수준 자체는 아직 별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절하 속도만을 놓고 본다면 아베 정권 출범 이후의 엔화절하는 엔화 환율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였다(<그림 3> 참조). 이것 또한 우리의 느낌으로 환산해 보면 달러당 1125원 정도하는 7월의 엔화 환율이 내년 1월에 이르러 달러당 1400원으로 지금보다 277원이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일본 수출기업들로서는 가히 황재를 만난 기분이었을 것이다.

일본이 제로금리를 처음 시작했던 1999년 3월에도 엔화 환율은 절하되었지만 절하의 궤적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 1999년 2월의 달러당 월평균 116.7엔에서 세 달 뒤 5월에는 달러당 월평균 121.95엔으로 밖에 상승하지 못했었다. 게다가 이러한 반짝 상승세는 3개월만에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2000년 1월에 이르러는 달러당 105.3엔까지 하락했다. 이에 반해 아베 정권 출범 이후의 엔화환율은 급격한 상승세를 6개월간 지속했는데, 여기에는 아베노믹스의 통화팽창 강도(強度)가 엄청나게 컸었다는 점은 물론, 아소 다로 氏 같은 정책 핵심 책임자들이 대폭적 환율절하의 도를 공공연하게 역설하고 다녔고, 그것이 실제 급격한 엔화절하로 이어졌다는 점 등의 배경이 있었다.

<그림 3> 엔/달러 환율 추이



<그림 4>전기대비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이러한 금융시장에서의 변화로부터 수출기업이 막대한 환차익을 올리는가 하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회복되고, 도쿄의 땅값이 오르는 등 과거에는 좀처럼 보지 못하던 새로운 움직임들이 금년 초부터 한꺼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베노믹스의 파격적인 내용과 금융시장에서의 가시적 성과는 장기간의 경기부진에 지쳐있던 일본 유권자들로 하여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고, 그에 따라 아베氏의 정치적 입지도 매우 공고해졌다.

금융시장에서의 이런 변화들이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데에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적지 않았었다. 그런 변화들은 어디까지나 유동성 팽창에서 시작된 심리적 분위기 호전일 뿐, 그것들이 과연 실물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을 이끌어내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13년 1/4분기 일본의 실질 GDP 전기대비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0.8%보다도 높은 1.0%로서 OECD 국가 중에는 세 번째로 높은 값을 기록했다(<그림 4> 참조). 2/4분기 들어서도 실물시장의 호전은 지속되어 5월에는 자본재 생산을 중심으로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2% 가까이 올랐고 3차 산업, 즉 서비스 산업도 1.2%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결국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은 실물경제 회복을 작동시키는 데에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부터 일본경제를 구해내는 데에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아베노믹스는 일단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힘입어 일본의 정책 당국자들은 2014년 말 실질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 올리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시각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는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화살이 주는 불안감 때문이다.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화살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화살은 SOC를 중심으로 하는 막대한 재정지출 확대이다. 금년 중 경기 회복을 위해 13조 엔의 추경을 편성하여 2013년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11.5%로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재정적자가 GDP 대비 11.5%라는 것은 사실상 재정위기나 다름없다. “PIGS 국가”라는 불명예스런 이름으로 불리던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이 2010년을 전후한 시기에 기록했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보면 그리스와 스페인이 2009년에 각각 15.6% 및 11.2%까지 갔었을 뿐 11%를 넘겼던 경우는 없었다(<표 1> 참조). 따라서 재정위기 역사상 가장 최근 사례인 남유럽 PIGS 국가들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경상 GDP 대비 11.5%의 재정적자를 내는 일본은 이미 재정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해도 좋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 가운데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일본의 240%에 근접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 가장 여건이 나쁜 경우가 그리스의 2011년 현재 GDP의 170.6%였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인 2012년 그리스의 국채비율은 158.5%로 대폭 하락하였다.

<표 1> PIGS 국가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 %)

	재정수지				국가채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2008	-9.9	-2.7	-3.7	-4.5	112.5	106.1	71.6	40.2
2009	-15.6	-5.4	-10.2	-11.2	129.3	116.4	83.1	53.9
2010	-10.7	-4.3	-9.8	-9.7	147.9	119.3	93.2	61.3
2011	-9.4	-3.7	-4.4	-9.4	170.6	120.8	108.0	69.1
2012	-6.4	-3.0	-4.9	-10.3	158.5	127.0	123.0	84.1

주: GDP 대비 비중.

자료: IMF.

일본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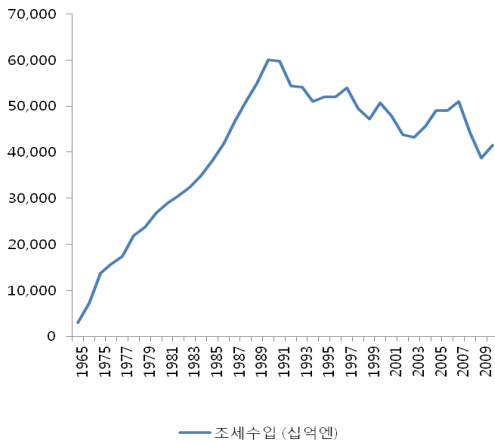
물론 국가채무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나라가 재정위기에 빠지라는 법은 없는 것 같다. 이는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경험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PIGS 국가들이 재정위기국가로 지목되던 2010년 당시 그리스의 국가채무는 GDP의 147.9%였으며 이탈리아가 119.3%, 포르투갈이 93.2%였지만 스페인은 61.3%에 불과했다.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불과 60%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를 겪어야 했던 스페인의 사례는 재정위기의 가능성이란 국가채무의 GDP 비율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그 나라 재정이

얼마나 지속가능하느냐 하는 점이다. 국가채무가 GDP에 비해 다소 높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만 한다면 위기에 빠질 이유가 없다.

일본재정은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가 세계 최악일 뿐 아니라 이미 지속가능하지 않은지도 오래 되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재정지출 규모에 비해 일본의 과세기반이 너무나 얇고 좁다는 데에 있다. 그 결과 2011년 현재 일본의 국세부담률은 GDP의 9.1%밖에 되지 않는다(<그림 6> 참조). 국가채무가 GDP의 240%이니까 환산해 보면 국세수입의 25배에 달한다. 또한 국세부담률이 GDP의 9%에 불과한데 재정적자는 GDP의 11.5%로서, 놀랍게도 재정적자가 국세부담률보다 더 크다. 세입보다 지출이 두 배 이상 더 크다는 뜻이다. 이러한 일본의 재정상황을 연봉 4000만 원 정도 되는 가정경제에 비유하자면 마치 연간 지출이 9000만 원 정도여서 매년 5000만 원 정도의 빚을 내는 것과 같다. 이제까지 낸 빚은 10억 원 정도 된다.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경제다.

<그림 5> 일본 조세수입 추이



<그림 6> 일본 국세부담률 추이



여기에서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이 정말로 성공을 거두어 2014년 말 인플레이션율이 2%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자.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현재 거의 마이너스 1% 수준이므로, 2014년 말 2%의 인플레이션율이라 함은 지금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인플레이션율이 3%p 정도 상승함을 의미한다. 이런 인플레이션 상승분이 금리에 전부 반영되어 금리가 만약 3%p 상승한다면 GDP의 240%인 국가채무의 이자지급을 위해 궁극적으로 매년 경상 GDP의 7.2(=240×0.03)%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정지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경상 GDP의 7.2%라 함은 2011년 현재 국세부담률의 80%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런 엄청난 재정지출 부담을 메우기 위해 만약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이자지급이 또 늘어나 재정부담은

추가적으로 더 커지는 악순환이 촉발되어 결국은 국가부채가 폭발하는 궤적(explosive path)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율이 3%p가 아니라 1%p만 상승해도 궁극적으로 경상 GDP의 2.4%에 달하는 이자지급액이 더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의 현재 국세수입의 26%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우리나라의 감각으로는 환산하자면 지금 국세 수입규모가 200조 원 정도 되니까, 그 26%라 함은 무려 51조원의 국세수입이 더 들어와야 이자지급을 충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정도로 막대한 국세수입이 인플레이션 1%p 증가만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상식으로 는 실현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계산이다.

결국, 아베노믹스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것은 국세의 경상 GDP 탄력성에 달려 있다. 실질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졌을 때 세금이 얼마나 더 빨리 걷히겠는가가 아베노믹스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만약 국세의 경상 GDP 탄력성이 1보다 충분히 커서, 금리상승에 따른 추가적 이자지급 부담을 증가하는 세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모를까, 만약 국세수입의 GDP 탄력성이 낮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충분히 걷히지 않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일본재정과 일본경제는 커다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세의 GDP 탄력성을 높이려면 세원을 확대하고 각 세목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조정하는,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늘어나는 이자지급 부담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세출 부문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대대적으로 삭감하는 뼈를 깎는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베노믹스의 세 화살에는 세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려는 재정건전화 계획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화살에는 재정건전화 방안들이 포함되어었어야 했는데, 거꾸로 금년 재정적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향후 10년 동안 100조에서 200조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투자를 하겠다고 하며, 2020년까지는 아예 재정흑자를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화살은 방향을 거꾸로 잡고 있다. 과녁을 겨누어야 할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화살은 과녁이 아닌 자기 자신을 겨누고 있는 셈이다.

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의 펀더멘털

아베노믹스의 성공으로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불어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채이자를 어디선가 조달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여 경기회복이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입의 증가가 이자지급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일본 재정은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순간, 재정위기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재정위기가 디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해결하기 힘든 도전임은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재정개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빠져 있는 아베노믹스라는 정책 패키지는 일본경제의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의 아베노믹스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다. 향후 전면적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아베노믹스는 일본경제를 구하는 열쇠가 아니라 일본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지름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베노믹스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일본경제를 살리는 특별한 처방이 되려면 세원을 넓히고, 필요한 경우 세율도 올리며,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하는 과감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무제한적 통화방출로 엔화환율 절하를 유도하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내겠다는 정책을 지금부터 약 10년 전 쯤, 그러니까 아직 국가채무가 GDP의 150% 정도였을 때 사용했더라면 성공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10년 전의 일본경제와 지금의 일본경제는 재정여건의 측면에서 질적으로 달라졌다.

일본은 지금 국가채무가 GDP의 240%에 달하기 때문에 실물이나 인플레이션보다 금리가 먼저 상승하면 그 즉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악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구조인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이데올로그들은 금리를 결정하는 채권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유동성을 대폭 늘이면 경기가 회복되고, 시차를 가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채권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경제원론 수준의 사고를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는 채권 가치와 관련된 수많은 요인들에 대한 기대들이 동시에 그리고 즉각적으로 금리수준에 반영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5월 23일의 주가폭락을 들 수 있다. 2014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을 2%로 끌어 올리겠다는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의 공언으로 일본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던 와중에, 공고롭게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를 연내에 종료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본 국채 금리는 1%대로 급등했고, 그와 동시에 주가가 7.3%나 폭락했다.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인플레이션 기대에 의해 금리가 덜컥 올라가버린 것이다. 채권시장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세 가지 화살을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나갔던 것이 아베노믹스의 중요한 결점이었다. 일본경제의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 정책을 펴으로써 실패의 요인을 안고 가게 된 것이다.

자연계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갑자기 커지는 것들은 기초가 불안한 법이다. 이날의 주가폭락은 아베노믹스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일본 자본시장이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재정을 반드시 건전하게 만들겠다는 신뢰성 있는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는 한 앞으로도 이런 일은 언제든지 반복될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장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

재정건전화 대책이 빠져 있는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를 더 커다란 어려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어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매우 상식적인 얘기이다. 그런데도 아베노믹스의 이데올로그들은 아베노믹스를 불완전한 상태로 남겨둔 채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치렀다. 이는 일본 여당 정치인들이 재정악화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재정의 위험성을 인식함에

도 불구하고 세금을 늘리고 지출을 삭감하겠다는 말을 유권자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본 정치인들도 최소한의 상식을 가졌다고 본다면, 그들이 재정악화에 전혀 무관심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마도 7월의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략 차원에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다만 거꾸로 재정팽창을 통해 경기회복을 추구한다는 말만 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

소비세를 도입할 때, 그리고 그 세율을 인상할 때마다 정권을 갈아치웠던 일본 유권자들의 성향을 감안한다면 그런 선거 전략적 판단은 정치 공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출범 이후 7개월이 지나는 동안,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던 일본 정치의 분위기는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힘들다. 국가의 장래보다 선거에서의 승리가 목표의 전부였다면, 그런 이유로 유권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메뉴로 내놓았었다면 그런 식의 정치는 국가의 이익보다 정치인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타락한 민주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정치” 인지는 몰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닌 것이다.

게다가 일본 유권자들의 인식수준도 우리로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세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의 벼랑끝에 선 것같은 순간에서도 재정지출을 오히려 대폭 늘이겠다는 아베노믹스에 저토록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의 현실에 대한 상식적 판단 대신 무조건 돌진하면 뭔가 해낼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일본인 특유의 집단 최면적 DNA가 상기(想起)되곤 한다. 아베노믹스를 두고 해외언론으로부터 “가미가제 이코노믹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세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런 시점에 당면하여 만약 우리나라의 기성세대 유권자들도 일본의 기성세대 유권자들처럼 국가재정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이익만을 생각하여 세입 늘이는 데에 반대하고 지출 늘리기만을 요구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재정도 지금의 일본의 모습으로 변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의원 선거 승리 직후 아베 내각은 기초재정수지를 2016년 3월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고 2021년에는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러한 재정적자 관리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8월에 제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 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세금증가와 지출삭감을 둘러싼 기성세대 및 미래세대, 기업 및 근로자,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이해대립을 깨고 재정을 환골탈태시키는 대담한 계획이 담길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은 성장전략이다. 당초에는 개방을 확대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며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정도의 골자만 제시되었다. 그러다가 구체적인 내

용이 일본 주식시장이 폭락한 이후인 6월 14일 발표되었는데, 향후 10년 동안 국민총소득 3% 인상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들이 대부분 과거에 이미 실행해 보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던 경제특구 확대라든지,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등 하는 지엽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었고, 일본경제를 살려 낼만큼 파괴력이 있는 정책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러한 실망감으로 니케이 주가는 다시 대폭 하락하였고, 달러당 103엔대까지 상승하였던 엔화환율은 달러당 94엔까지 내려왔다.

일본경제가 성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에너지 부문, 사회보장제도 및 농업부문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들로서 6월 14일 발표된 세 번째 화살에는 7월의 선거를 의식하여 그 구체적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아베氏は 세 번째 화살의 구체적 내용이 호응을 얻는데에 실패하자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과감하게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감세 혜택을 주는 등 제2차 성장전략을 가을에 발표하겠다”는 언급을 한 바 있었다.

이제 아베의 연립정권은 지난 7월 21일의 참의원 선거를 석권하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을 넘기는 안정적 정치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본 및 해외의 언론과 투자자들은 다른 어떤 화살보다 이 세 번째 화살이 성공해야 일본경제가 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며 과연 세 번째 화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화살이 성공하여 일본경제가 회생에 성공하더라도 재정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회생도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경제의 취약성

GDP 대비 국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일본재정에 위기가 닥치지 않았던 이유는 대외적으로 외환수급에 문제가 없었고 내대적으로 금리가 제로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언제나 GDP 대비 2~3% 정도의 막대한 흑자를 내왔었다. 그러다가 <그림 7>에서 보듯이 2011~2012년을 거치면서 일본의 경상수지는 더 이상 대규모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무역수지의 경우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의 적자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는 언제나 충분한 외환수급이 가능하게 했던 핵심적 요인이었는데 이것이 최근 들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금리 또한 언제까지나 제로 수준에서 요지부동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난 5월 말에 보았던 것처럼, 미국 양적완화의 종료 여부와 아베노믹스의 인플레이션 기대효과에 따라 언제라도 빠르게 급등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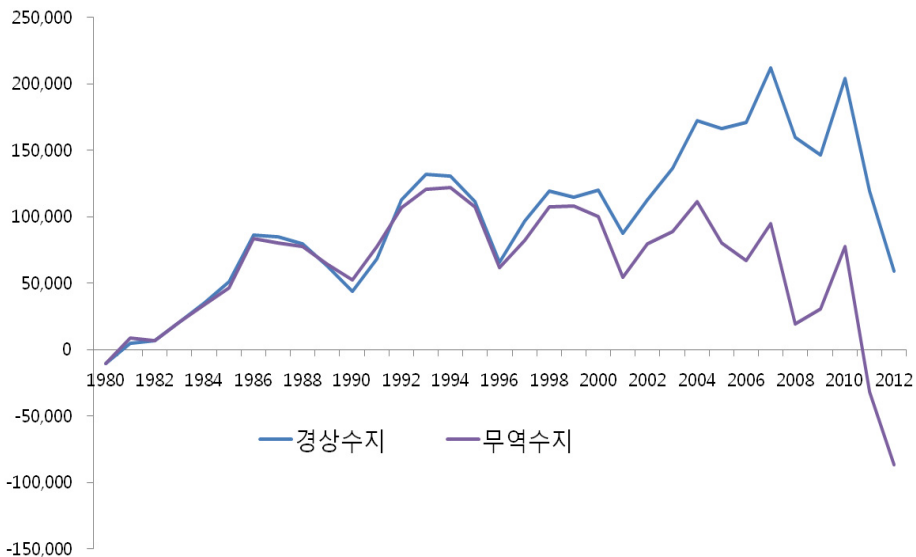
또한 일본국채의 거의 전부를 내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점도 일본재정의 안정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특이한 요소로 알려져 왔다. 이런 요소는 지금의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여건임이 틀

립했다. 국채의 외국인 보유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환위기가 동반하여 나타날 가능성은 작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채 보유비율이 아무리 작아도 재정위기 발생시, 일본경제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리란 보장은 없는 것이다.

현재 일본 국채의 80% 정도가 은행, 연금, 보험 등을 비롯한 일본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만약 위기상황이 도래하여 국채금리가 폭등한다면 그것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가치가 폭락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본이 급락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들은 그에 맞추어 대출을 줄이는 소위 자본경색(capital crunch)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에 따라 일본의 실물경제는 갑작스런 위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일본경제 전체가 커다란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만약 이런 과정을 통해 일본에서 자본경색이 나타난다면 그 파장은 일본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 즉, 자본가치가 급락한 일본 금융기관들은 해외에 투자하고 있던 자금들을 회수하거나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하기까지 일본이 엔화자금을 약 300억 달러 정도 회수해 가는 바람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었던 것과 유사한 일이다. 당시 일본은 금융위기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았던 것은 해당 일본 금융기관으로서도 불가피했을 수 있다. 어쨌든 현재 일본 금융기관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라면 누구든지 1997년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일은 얼마든지 겪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일본의 국제수지(백만달러)



최근 IMF도 현재의 아베노믹스에는 재정건전화와 성장전략이 결여되어 있다는 우려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 정도면 일본의 재정이 일본경제에 커다란 위협요인임은 누구나 아는 공공의 지식(public knowledge)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말 이후 지금까지 일본 재정에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6월 중반 이후 다시 주가가 상승하고 달러당 엔화환율도 95엔 대에서 100엔대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에 대한 투자자들이 일본재정의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괜찮다”라는 식의 단기적 투자성향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보통국가와 군대 그리고 재정

아베 氏를 필두로 하는 일본의 우익들은 이번 기회에 일본 헌법을 개정하여, 방어만 할 수 있는 자위대가 아니라 공격도 가능한 군대를 갖기 갈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통국가”가 되지 못한다고 역설하는 아베 氏의 모습은 이미 국내에도 수차례 전해진 바 있다.

국가가 수행하는 수많은 기능을 필요 순서로 하나씩 하나씩 제외시켜나갈 때 가장 마지막으로 남는 기능이 전쟁의 기능과 징세의 기능이라고 한다. 국가가 존재하려면 영토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무력수단으로서 군대가 필요하고 군대와 경찰 및 최소한의 행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세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다는 말 자체는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은 방어만을 위한 군대를 이미 70년 가까이 보유해 오고 있다. 국가로 존재하기 위해 침략능력을 가진 군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난 70년 동안의 일본 스스로가 잘 증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거의 벼랑 끝에 몰린 이 시점에서 자위대로는 만족 못하겠고 굳이 군대를 가져야겠다고 나서는 일본의 우익들에게 보통국가라 함은 외부침략으로부터 자국영토와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 말고도 원하면 언제든지 타국영토와 타국민을 침략할 수도 있는 나라인 것이다.

일본의 자위대가 군대로 바뀌어 방어뿐 아니라 공격도 허락받게 된다면 일본의 방위비는 줄어 들기보다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시기에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목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최종적 기능이 전쟁과 징세기능이라는 말의 의미는 보통국가라면 나라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가는 것도 군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베 氏의 희망대로 일본이 개헌을 통해 공격의 기능을 갖춘 군대를 보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되자마자 일본재정이 위기상황에 빠진다면 그와 같이 재정이 파탄상태인 국가도 과연 보통국가의 모습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베 정권은 현재 2000년대 고이즈미 정권에 버금가는 국민적 지지와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를 기반으로 아베 정부가 향후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는 전적으로 일본인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일본경제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그런 집결된 에너지는 군대 보유보다는 재정건전화 위해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리의 대응

참의원에서 압승을 거둔 가장 핵심적 요인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지지였다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의 압승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하는 기회였다. 이와 같이 아베 氏의 정치적 자산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정책 당국자 및 정치인들의 아베노믹스 관련 발언이나 정책 홍보도 선거 이전에 비해 더욱 거침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노믹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일본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 보다는 우리경제의 입장에서도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경제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아베노믹스에 의한 급격한 엔화절하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는 부담요인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일본 수출기업들의 경영실적이 금년 들어 빠르게 호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그들의 경영전략도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어 그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엔화는 달러당 100엔 정도이다. 이번 선거에서 아베 내각의 승리로 아베노믹스가 가속화되고 그에 따라 엔저정책도 다시 한 번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금년 말까지 엔화는 달러당 108~110엔 수준으로 절하된다는 전망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런 전망이 실현된다면 작년 말 아베 정권 출범직전 달러당 76엔대 정도였던 것과 비교할 때 엔화는 일년 만에 무려 45% 가까이 절하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엔화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앞서 <그림 3>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엔화는 지난 1995년 가을부터 2008년 가을까지 13년 동안 100엔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고 이 기간 중 평균환율은 달러당 115엔이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면서 전세계 자금이 일본 외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여 일본으로 몰리면서 엔화가 절상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엔화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글로벌 재정위기로 모습을 바꾸던 2010년 하반기부터 달러당 80엔대로 내려왔었고 2011년 여름부터 작년 10월까지 1년여 동안에는 달러당 70엔 대라는 사상초유의 엔고를 나타냈었다. 그러다가 아베 씨가 총리에 취임하면서 반년 만에 급격히 올라 금년 6월 말 현재 리먼브라더스 사태 발생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상승하였다. 즉, 아베노믹스 출범 이전의 엔화 환율은 특수상황에 따른 엔고였다. 글로벌 위기 이후 작년말까지의 초 엔고는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으로서는 엄청난 행운의 기간이었던 것이다. 지금의 달러당 100엔인 엔화환율은 달러당 70엔대라는 사상 초유의 엔고기간과 비교하다 보니 굉장히 많이 절하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일 뿐, 심각한 엔저가 왔다기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누렸던 행운의 기간이 사라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달러당 110엔까지 절하된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사실상 과거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며, 특히 정책 기조를 바꿔가면서까지 거기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물론 아베노믹스의 등장으로 엔고가 지나갔으니 이제는 응분의

긴장이 필요하고, 엔화 절하가 혹시 지나쳐 과도한 엔저가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엔화 절하에 민감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계(視界)를 넓혀 일본경제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테면 아베 정부가 8월에 발표하는 재정정책 방안에서도 만약 신뢰할만한 재정건전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채,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 견지해오던 바, “경기만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또 다시 재정악화를 용인하는 행태를 되풀이 한다면 우리경제는 일본경제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비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회복, 잃어버린 20년의 종언 등등이 아베노믹스의 최종 목표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아베노믹스가 이러한 최종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위험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재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대책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베노믹스는 일본경제의 편더멘털과 맞지 않는 정책조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의심받는 순간 아베노믹스는 심각한 도전에 당면할 것이다.

앞으로 18개월 이내에 일본경제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18개월 이내라는 얘기가 과연 정확한 전망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이 지난 뒤 미국과 유럽의 재정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어가는 시점에서 일본재정만이 계속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면 일본의 국가채무는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 두 번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당나귀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신뢰할만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대책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 대책이 포함되지 않는 한 아베노믹스는 잘 꾸며진 경제정책보다는 하나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유권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참의원 선거에서의 압승을 계기로 아베 정부가 일본 사람들에게 듣기 싫더라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들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오는 가을에 열리는 국회를 성장전략 실행국회로 규정하고 경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하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다. 지금의 일본을 보면 ‘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경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경제를 닮아가고 있다. 실질 성장률 둔화, 국내투자 침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급증, 인구 고령화, 부동산 가격 둔화 등등은 일본의 장기침체가 시작되던 시기에 나타났던 증상들과 너무도 비슷하다.

돈을 써야 하는 기업부문이 저축을 늘리고 있고 저축을 해야 할 가계가 빚을 늘리고 있다. 그러

다보니 자금이 대기업에 가서 쌓이고 고일 뿐, 중소기업과 가게에는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다. 우리경제가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핵심원인이 바로 이 현상이다. 기업에게 유리하고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경제의 소득분배 메커니즘을 바로 잡아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이 일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1998년 IMF 위기가 님을 때는 뭇가를 잘라내고, 댗붙이고, 털어내는 식의 하드웨어적 개혁을 하면 넔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다방면에 걸친 법적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경제 전체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며 관행과 인식을 바꾸어야 하는 소프트웨어적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말은 일본이 장기침체에 빠진 이후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이다. 그러나 그 이후 실제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일본의 전철을 꾀했던 사례가 무엇이였는 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동산 버블 문제만 해도 그렇다. 1990년대 초의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가 장기에 걸친 침체를 가져오는 것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부동산 버블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2002년에서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이 1980년대 후반에서 1991년까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금리를 통해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내고 키웠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키워진 부동산 버블이 2008년 이후 조정을 받아 부동산 시장이 현재까지도 아직 침체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경제의 흐름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당시 일본은 선진국으로서 부동산 버블 붕괴 때문에 장기침체를 겪었던 선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모르고 버블을 키웠다는 변명이라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바로 옆에서 두 눈으로 똑바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고야 말았던 것 아닌가?

누군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말은 그의 경험을 막연히 머리로만 배우면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가 밟았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그가 했던 행동과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과거 일본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는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왜도난마식의 해법을 찾아내고 제시하며 실행하는 일은 일본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